

시론



임명규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지난 대선에서 한 슬로건이 큰 반향을 일으킨 때가 있었다. 2012년 대선에서 손학규 후보가 내세운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이다. 1998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의 '준비된 대통령'과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는 후보자의 당선 효과가 성공한 슬로건을 만드는 데 한 몫을 했다. 하지만 '저녁이 있는 삶'이 손학규 후보의 낙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주 회자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모두에게 저녁은 있다. 저녁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평균적인 직장인에게 저녁 '시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리적·심리적으로도 저녁시간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저녁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것만큼 매력적인 정치적 슬로건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저녁뿐일까? 시민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시간도둑과 시간주권

일 것이다. 우리에게 시간은 삶이며 때론 생명이고 또한 돈이 아닌가?

한국의 노동자는 연간 1967시간 일한다. OECD 평균(1726시간)보다 연간 241시간 더 일한다.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30일 넘게 더 일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에 비하면 한국은 576시간(8시간 기준 72일) 더 일하고 있다. 좀 과장한다면 한국인은 12개월 일할 때 독일인은 10개월도 채 일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선택'한다. 일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은 동일하지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은 한국인과 독일인이 다른 것이다. 한국에는 시간도둑이 사는 걸까?

더구나 한국 평균 직장 통근시간 역시 OECD에서 가장 긴 58분이다(2018). OECD 평균이 28분이니 약 2배를 넘어선다. 긴 노동시간에서 통근시간까지를 더한다면 한국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은 더 줄어든다. 그런데 그것은 한국 안에서조차 마찬가지다. 기업형태별 직장인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48.8시간인 반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45.4시간으로 나타났다. 직무별로는 생산, 기술직이 51.6시간으로, 전문직은 46.6시간이다(잡코리아, 2019). 시간 사용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깨

어려 갖는 '시간주권(working time sovereignty)'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국제적으로도 시간주권을 보장하지 못하며 그것도 기업별·직종별로 차등적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의 미래 보고서'(2019)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면 건강과 복지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면서 노동자의 시간주권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지원'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에 장려금 지급하는 사업 진행하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보건의료산업 주 32시간제(4일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확실히 시간주권의 확립은 '주 4일제' 주장으로 수렴되는 듯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 혹은 반발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의 양은 더 줄어든다. 그런데 그것은 한국 안에서조차 마찬가지다. 기업형태별 직장인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48.8시간인 반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45.4시간으로 나타났다. 직무별로는 생산, 기술직이 51.6시간으로, 전문직은 46.6시간이다(잡코리아, 2019). 시간 사용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깨

7년이니, 100년 만에 그의 주장이 국제적인 기준이 된 셈이다. 그리고 100년 후인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독일은 1967년에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이후 1995년부터, 프랑스는 2000년부터 주 35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통은 겪었지만, 한국 사회는 시간주권의 확대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갈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접근해야 할 집단이 청년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청년에게 일자리를"이란 말은 청년에게 최소한의 노동시간이라도 보장해줄란 뜻이다. 사실상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는 청년의 청년일자리는 사업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노동시간이라도 단기 인턴의 형태로라도 제공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다. 노동시간의 보장은 노동시간의 몫을 둘러싼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주권의 보장(노동시간 단축)은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의 청년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는 분리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직장인의 '저녁이 있는 삶'과 청년의 '내 일이 있는 삶'이 반대말이 아니라 '이음동어'가 될 수 있도록, 선거 슬로건을 넘어선 정치적 비전이 필요하다.

社說

정작 친환경차 이용 외면하는 자치단체장들

광주시장의 전용 관용차는 K9이다. 넥소 수소차도 함께 이용하고 있지만 '1호차'로 보기는 힘들다. 전남지사는 제네시스 EQ900이다. 광주 자치구의 경우 동구는 카니발, 북구와 남구는 카니발 디젤, 서구는 니로 전기차, 광산구는 K8 하이브리드다. 도내 22개 시·군은 체어맨W, 아슬란, 카니발, 제네시스, K9 등을 사용하고 있다. 전지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이른바 친환경차는 광주·전남 29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곳에 불과했다. 대기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는 14곳에서 1호차로 운행 중이다.

전국의 각 지자체가 전기자동차 물량 확보로 보조금 지원을 적극적이고 확대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광주시만 보더라도 지난 6월 추경안을 확정, 올해 전기차를 428대 추가 보급한다. 기존 물량 720대를 더하면 모두 1천148대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다. 더불어 지자체들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저감장치 장착 지원 사업 등 수송 부문 관련 친환경 정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도민을 비롯해 법인, 기관, 개별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를 독려하면서 도 단체장들은 정작 이를 외면해 따가운 눈총을 맞고 있다. '차량 임대 기간이 남아 있다', '기관장 업무 특성상 이동거리가 많아 안전성과 편의를 고려했다' 등의 사유를 들었으나 공색하다. 광주시는 탄소중립2045 선언으로 탄소 저감 대응을 5년 앞당긴다는 방침을 세웠고, 전남도 역시 전국 최초로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관용 '1호차'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사정이 아니라, 이 참에 전격적으로 친환경차를 도입했으면 한다. 아울러 실제 이용을 확대해 주민들 눈에 자주 띄면 좋을 듯 싶다. 이것이 솔선수범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글로벌 이슈가 된 지 오래며 올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적 중대 과제로 부상했고 지자체 또한 마찬가지다. 당장에 가능한 것부터 실천해야 하는데, 본보 취재를 통해 밝혀진 1호차 관리 실태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문화예술도시 광주 위드코로나 전략 준비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공연장은 물론 야외행사나 지역축제가 대부분 취소되는 사태에 직면했다.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위주로 전환되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 결과, 2020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행 경험률은 전년 대비 6.0%가 감소한 86.4%였다.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는 5.0회, 일수는 7.6일, 지출액은 53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들이 방문한 여행지 중에서는 광주가 1.3%로 최하위에 그쳤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간한 문예연감 2020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공연예술 공연 횟수는 광주는 3천347회다. 전국 평균 7천469.3회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누누이 문제됐듯이 충분히 보고 즐길만한 길러 콘텐츠의 부재를 반증한다. 나아가 코로나 속에도 더욱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등산국립공원 등 정중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비엔날레 등 매력적인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가 뉴노멀 시대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광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어려운 사정이지만 외지 관광객을 꾸준히 끌어모아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적극행정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적절한 지적으로 읽힌다.

위드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격적탄을 맞은 문화예술·관광 분야도 기지개를 켜고 도약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언제까지 불거리와 즐길거리가 태부족해 인지도가 떨어진다며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음을 따르며 광주의 공연예술 공연 횟수는 광주는 3천347회다. 전국 평균 7천469.3회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누누이 문제됐듯이 충분히 보고 즐길만한 길러 콘텐츠의 부재를 반증한다. 나아가 코로나 속에도 더욱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등산국립공원 등 정중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비엔날레 등 매력적인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가 뉴노멀 시대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광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어려운 사정이지만 외지 관광객을 꾸준히 끌어모아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적극행정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적절한 지적으로 읽힌다.

기고



임현균

후쿠오카총영사관 영사
前 전남도 안전정책과장

주후쿠오카총영사관에 부임한 지 2년이 지났다. 외교관으로서 한·일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해 보겠다는 부분 마음으로 부임했지만 한·일간 경제문제, 강제징용자 등 과거사 문제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였고, 그런 와중에 코로나19까지 발생해 공공외교 대면활동은 규모가 많이 축소되고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

총영사관은 후쿠오카시의 상징인 후쿠오카타워와 소프트뱅크야구단의 거점인 페이페이 야구경기장과 인접한 곳으로 2천평의 부지에 한옥 형태의 공관과 관저가 있다.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인 여느 공관과는 달리 야트막한 태극문양 한국식 담장에 한국기와가 울려져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韓스타일'의 중심

있고 담장 넘어 무궁화꽃이 만발할 때면 누가 보더라도 한국영사관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총영사관과 관저 건물 외관은 한옥스타일로 건축되어 있으나 건물 내부도 한국스타일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쉬워 하던 중 외교부에서 추진중인 한국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전통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2021년 '韓스타일 공간연출사업' 대상에 민원실이 선정돼 최근 완공됐다.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은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요소인 전통소재 즉 한식, 한복, 한옥, 한소리 등을 접목하여 한국 스타일이란 컨셉으로 표현하는 공간연출사업이다. 이번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의 완공으로 공관의 외관뿐 만 아니라 실내도 한국스타일로 단장함으로써 일본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양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을 위해 한국전문문화재

사진, 실측자료 등을 전문가에게 보내 3D입체화 작업 후 공간디자인 연출안을 작성했고 연출안에 맞는 전통공예품을 해체해 외교행낭을 통해 일본으로 보내지고 현지에서는 연출안대로 조립, 완공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일본인은 물론, 공관 방문을 희망하는 재외국민에게도 총영사관의 한국스타일을 개방해 후쿠오카 및 규슈지역에서 한국의 전통스타일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슈 지역에는 제25대 백제 무령왕탄생지와 정유재란 때 끌려와 일본 도자기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삼평과 사츠마 도자기로 유명한 심수관 등 소중한 한국 관련 인연지가 많이 산재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곳은 일본서기에

카라시마에서 무령왕을 낳았다고 전해진다.

가카라시마항구 가까이에는 2006년 광주시민들의 모금으로 건립된 무령왕탄생지 기념비가 제작돼 있다. 광주 무령왕릉의 아치와 전설 형태를 모티브삼아 익산 화강암으로 제작됐다고 한다. 탄생지로 알려진 오비야우라 동굴에는 마을 주민들이 탄생지를 알리는 목판이 게첩돼 있었는데 총영사관에서 2020년 한국산 화강암으로 교체한 후 그 목판을 공관으로 옮겨 놨다.

일본 도자기의 시조로 추앙받는 이삼평은 정유재란 때 아리타 지역으로 끌려와 도자기 생산에 적합한 양질의 고령토(백토)를 발견하고 일본 최초로 백자를 생산했는데 이 도자기가 유럽으로 대량 수출되면서 유명해졌다고 알려지고 있다.

총영사관에서는 우리나라와 관련이 많은 인연지는 물론 '총영사관 민원실 한스타일 공간'과 '규슈속의 한국 찾기' 행사 등 공공 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 조상의 우수성을 알리고 일본인들이 한국을 이해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독자투고

응급처치의 중요성

응급환자 발생 시 119신고도 중요하지만 초기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원 도착 전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 사망률과 장애율이 많은 차이가 있음은 이미 선진국에서 증명된 바 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목적은 사망률과 장애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최근 10여 년간 통계청의 사망 원인 상 뇌혈관질환을 포함해 고혈압성 질환, 동맥경화증, 심장질환과 같은 순환기계 질환으로 숨진 이가 사망자 전체 1위를 차지했고, 암으로 인한 사망이 2위, 교통사고와 자살과 같은 각종 사고사가 3위였다.

3대 사망 원인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순환기계 질환과 각종 사고다. 순환기계 질환은 식사·생

활방식 변화, 현대화된 환경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사고는 다양화된 사회 환경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생존율은 15%, 그렇지 않은 경우는 6.2%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심장 정지는 골든타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심장이 멈춘 후 4분 이상 경과하면 뇌 손상의 가능성이 커진다. 6분 경과 시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며, 10분이 지나면 심한 뇌 손상 혹은 뇌사 상태로 접어든다. 따라서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이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응급처치 시작 시간이 중요하며 이는 응급의료 체계 확립과 시민들의 자발적 응급처



치 참여와 교육이 있어야 한다.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은 ▲쓰러진 환자의 상태 확인하기 ▲119에 신고하기 ▲환자의 호흡 여부 확인하기 ▲심폐소생술 실시하기 ▲가슴 압박 30회 시행 ▲인공호흡 2회 시행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 반복하기 순서로 하던 된다. 이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 시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다면 5주기(1주기는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시행하는데 이때 가슴 압박이 5초 이상 중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

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이 회복됐는지도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됐다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심정지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계속 관찰해야 하며 만약 반응이나 호흡이 없어진다면 재빨리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한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심폐소생술. 우연히 쓰러진 사람을 목격하게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도록 기억해두는 건 어떨까? 죽음의 문턱을 바라보고 있는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용기가 급성 심장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작은 영웅이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꼭 숙지하고 실천하자. <이건호·담양소방서 담양119안전센터 소방사>

'층간소음 갈등'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취재수첩



김동수 (사회부 기자)

지난달 27일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한밤중에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이 사건으로 일가족 가운데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층간소음 갈등은 전국적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보복성 범죄라는 것이다.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폭행·협박, 심지어 인분을 투척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 신고·민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집안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 분쟁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층간소음 상담사례는 1천492건으로 광주 879건·전남 613건인데, 2019년 736건에 비해 1.99배 증가했다.

전국에서 같은 기간 전화 상담 신청은 4만2천250건으로, 2019년 2만6천257건 대비 60.9% 증가했다. 올해 1-8월 상담 신청도 3만2천77건으로 이미 전년 대비 건수보다 더 많은 상태다.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이 공동주택으로 급속히 변모했지만, 생활 방식은 '공동체 문화'를 따라 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갈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문제로 커지자, 2022년 7월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 307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자체가 사용승인 전 단계별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한다. 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용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 간 소통·대화다. 평소 이웃관계를 형성하면서 해결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관련 기관 등에서 중재 창구를 마련하거나 중재자를 발굴·교육하고, 입주단 대표의 역할·권한을 부여하는 방법 등도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층간소음 갈등이 빚어낸 '일가족 흥기 참극'이 또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 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 대안이 시급하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8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9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정취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체부 650-2065 지역특집부 650-2060 사신부 650-2080 실사실 650-2006 T V 본부 650-2009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광고국 650-2072 경영지원국 650-2010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 제1호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